

〔 탈성장과 인구 〕

이재경

성장신화로부터의 탈주술화

탈성장신화

역사적 관점에서 본 일본 경제의 장래

다케다 하루히토 지음
여인만 옮김



경제성장이 경제학의 지상명제가 된 것은 겨우 **50년** 밖에 되지 않았다.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실현하는 수단이었던 **경제성장이 언제부터 목적으로 변화했고 정부와 국민 모두 이 용어의 주술에 빠져있다.**

밀은 소득이 아니라 자유가 최대의 선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즉, 사회발전의 경로는 물질적 풍요로부터 이탈해 간다고 생각했으며 경제적으로는 경제활동의 정상상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여기서 정상상태라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0**에 가까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인구증가가 멈추었던 에도시대 후반기 농민들은 전반기에 생활상태가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일하는 시간보다는 휴식시간을 늘린 것 같다... **연간휴일이 그전의 30일에서 80일로 늘었고 맘 내키는대로 노는 날, 은밀히 노는 날 등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들은 현재 과잉소비를 억제해야만 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결코 사람들의 생활이 그 후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는지 활력을 잃어버린다는지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수준에 머무르는 것(제로성장)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선진국은 좀 더 효율적인 자원 이용을 모색하고 우리들의 생활을 인간적인 풍요로움으로 유도해 갈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은 기후위기와 양립할 수 없다!

성장 이후의 삶

케이트 소퍼 지음 | 안종희 옮김



지속가능한 삶과 환경을 위한
'대안적 소비'에 관하여

불안한 즐거움, 불가능한 만족,
끝없는 노동을 부르는 소비의 고리를 끊고
이제, '다른 즐거움'을 사라!

한문화

YES24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다른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와 양립할 수 없다.

성장 중심 접근법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성장을 발전의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조건으로 제시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생존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생산활동은 지구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들고 다음세대에도 이미 피해를 주고 있다.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자본주의의 확장 중에서 어느 쪽이 지구적으로 더 많은 이득인지 숙고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사람들은 시민이자 노동자이다.

성장은 기후위기와 양립할 수 없고(객관적 조건), 시민들의 다층적인 갈등은 탈성장으로 갈 수 있는 동력(힘의 관계)이 될 수 있음.

- 노동자의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것인가?

성장 이후의 삶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성장 이후의 삶

케이트 소퍼 지음 | 안종희 옮김

POST-GROWTH LIVING

지속가능한 삶과 환경을 위한
'대안적 소비'에 관하여

불안한 즐거움, 불가능한 만족,
끝없는 노동을 부르는 소비의 고리를 끊고
이제, '다른 즐거움'을 사라!

한문화

YES24

미래의 일자리부족 가능성이 노동중심의 생활방식을 좀 더 여유있는 생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늦었지만 붙잡아야할 기회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동 이후 사회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고 결국에는 대체할 것이며...

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전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탈성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보편적 기본소득과 밀접하게 연결

- 다만 이것이 미래의 전망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기본소득,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어떤 의미인지 고민이 들게 만듦
- 기본소득으로 가는 중간과정에서 참여소득의 의미(?)

탈성장의 개념적 혼란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문명과 담론 총서 10

재난문명

경제·환경·기후
복합위기와 탈성장 대안

박지형 지음

NANAM
나남출판

“경제적 자족은 모든 국가적 위대함과 진보의 핵심적 기초다” 고 주장했다. 탈성장운동의 중요한 목적은 “충분함” 을 훨씬 넘어선 과잉성장의 시대에 소디가 말한 자족을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라투슈가 탈성장을 “경제적 축소 혹은 다운스케일링” 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탈성장의 원뜻은 역성장에 가깝다.

라투슈는 탈성장이 하나의 체계를 갖춘 이론이기보다는 성장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제시된 키워드일 뿐이며 “무성장”(non-growth)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용어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탈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성장 없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가능한 번영을 가져다 줄 유일한 대안일까?

인간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려야 하는가?

성장 없이 우리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가?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문명과 담론 총서 10

재난문명

경제·환경·기후
복합위기와 탈성장 대안

박지형 지음

NANAM
나남출판

탈성장주의에 대한 핵심질문은 “우리 사회가 성장 없이 유지되거나 발전할 수 있는가”이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없다면 성장없는 경제는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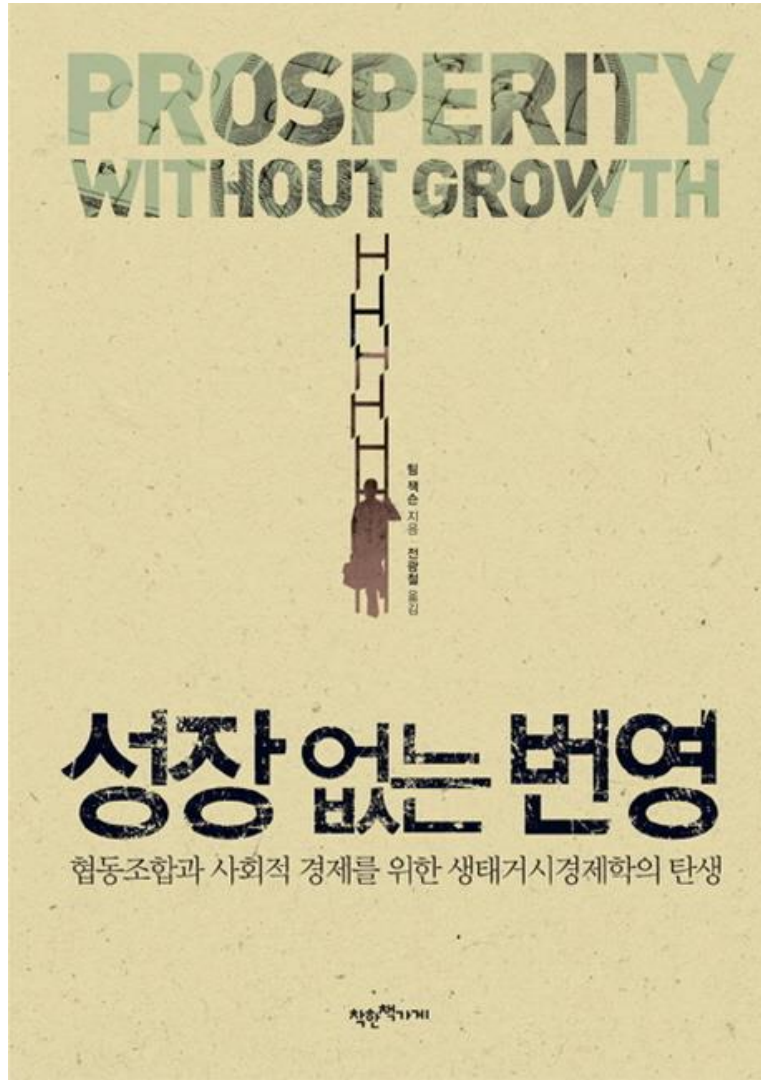
리버럴 좌파가 주도하는 탈성장론은 성장에 대한 비판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개인의 자기절제를 통한 소비제한과 같이 개량주의적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곤 한다.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인적 해법은 미스매치?

개인들의 전환과 실천이 어느정도 모여야 생태전환이 가능할까?

개인의 수양 등을 강조하는 동양적 전통에서는 탈성장론이 어느정도 부합?

성장없는 번영이 가능할까? 매우 현실적인 고민들



모든 나라가 성장을 포기해야 할 까닭이 없지만 선진국인 빈곤국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대폭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국가에서는 성장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들이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세계는 곧 커다란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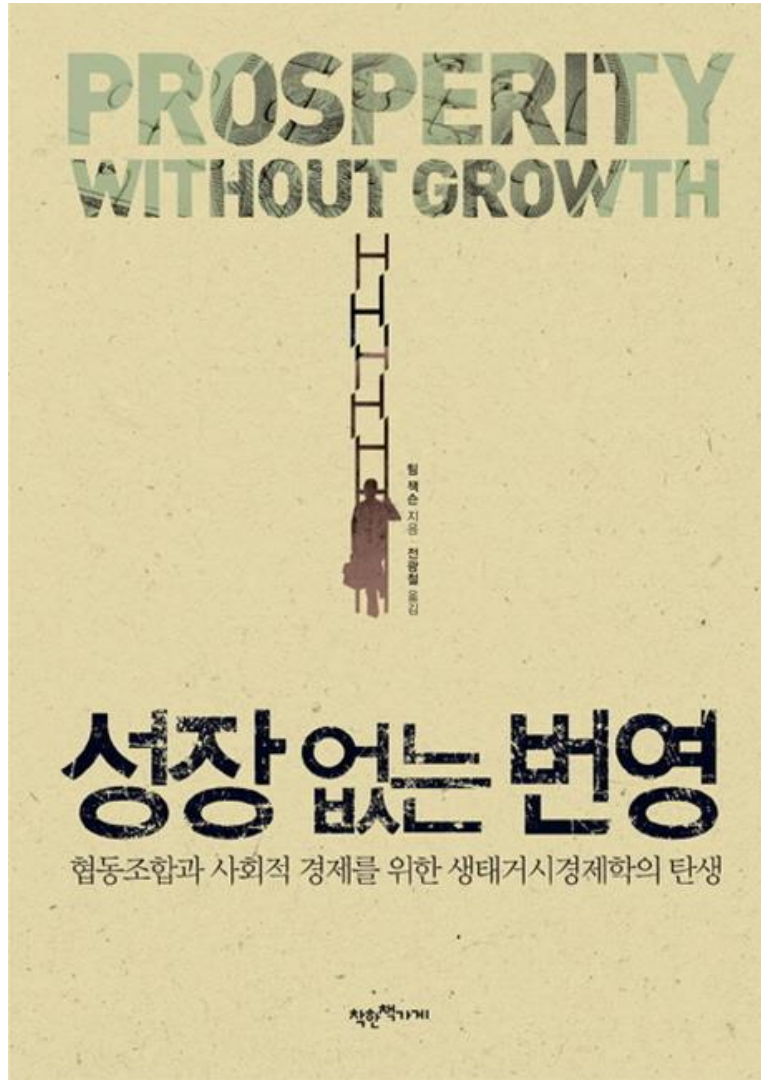
인구가 많아질수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인구가 줄어들수록 생태자원에 대한 압박은 줄어든다.

물질에 대한 중요성이 덜한 사회는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번영의 증대가 경제성장과 같은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장없는 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증하지 않는다...번영은 물질적 부를 넘어선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사회생활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성장의 딜레마 :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 탈성장은 불안정하다(적어도 현재 조건에서 소비수요의 감소는 실업의 증가와 경쟁력 하락, 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제언



한계를 설정하기

- 자원이용 및 배출한도 설정
-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개혁
- 개발도상국의 생태적 이행에 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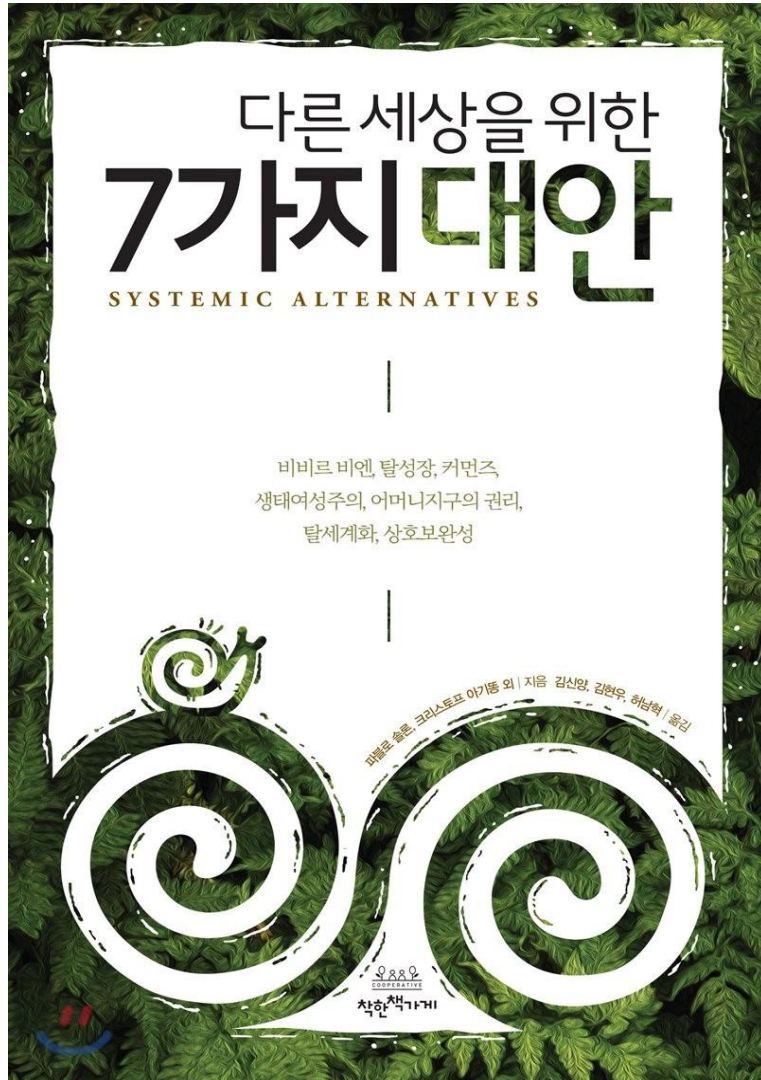
경제모델 고치기

- 생태거시경제학 개발하기
- 일자리, 자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금융 및 재정건전성 높이기
- 국민계정 개선하기

사회논리 변화시키기

- 노동시간 정책
- 구조적 불평등 제거
- 능력과 번영의 측정
- 사회적 자본 강화하기
- 소비문화 해체하기

탈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다!



탈성장이라는 용어는 그 성격상 도발적이며 불경스럽기까지 하다. 이는 성장을 위한 성장, 다른 말로 하자면 이윤을 위한 이윤 추구의 숭배에 지배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 일침을 가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의 한계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성장을 촉구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받아들여져서 그 결과 관건이 되는 문명의 문제를 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성장 비판론자들은 포스트성장, 비성장, 반성장 또는 이반 일리치의 표현으로 성장중독깨기와 같은 용어를 선호한다.

탈성장은 하향적 경기변동 또는 침체로의 전환이 아니다. 탈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계획적으로 축소를 지향하고 우리의 필요와 선택을 검약한 풍요로 재정의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선택이다.

탈성장은 남부국가에서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선택지다...하지만 탈성장은 성장기반 사회로 진입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북반구의 경제적, 문화적 지배와 단절하기 위한 것이며 전통문화속에 이미 존재하는 자제와 온유의 감각을 되찾기 위한 요청이기에 남반구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탈성장은 구성적 개념이며 상식이며 실천이다!



상호부조와 돌봄이라는 커먼즈가 기본이 되도록 사회를 재구축하고 경제성장이 아니라 좋은 삶과 형평을 지향하도록 집단적 삶의 목표를 재조정하는 길로 안내한다.

탈성장을 옹호한다는 것은 경제성장 추구의 종식을 옹호한다는 것, 좋은 삶 또는 행복한 삶을 삶과 사회의 목적으로 삼음을 옹호한다는 것이다.

탈성장론은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고 소비해야 한다고 더 적게 생산하고 소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많이 공유하고 더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며 동시에 파이 전체의 크기를 줄어들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성장론은 경제성장 추구의 동력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는 통상적 확신을 뒤 흔들고자 한다...동시에 세계 곳곳의 오래된 문화, 종교 전통이 진흥하는 이를 테면 “더 많은 공유와 더 적은 결핍“, “만족할 줄 알자 ” 와 같은 상식들을 살려내자고 요청한다.

탈성장은 단일한 이론이나 행동계획을 주장하지 않는다...놀라울 정도로 다채로운 사상가, 활동가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여러 주제를 두고 건실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개인에서 출발할 것인가? 너무 늦지 않을까?



요르고스 칼리스 + 수전 폴슨
자코모 달리사 + 페데리코 데마리아

산현 포럼 기획
우석영 + 장석준 옮김

탈성장이라는 용어 자체는 유럽에서 발판을 확보했지만 이 이름이 지시하는 실천과 이론은 남미(부엔 비브라), 인도(스와라지), 남아프리카공화국(우분투) 등지의 오랜 또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전통들에 기대고 있거나 그것들과 연관되어 있다.

당대의 혁신과 전승된 옛 지혜와의 교류는 국민총행복을 만들어내려는 부탄정부의 의지에서 입증된다.

제 몸집을 불리는 경제들이 도발한 막대한 자연파괴 앞에서 고기를 적게 먹고 자건거로 출퇴근하고 공유물을 늘려나가는 식의 개인의 소소한 성취란 실망스럽고 허망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람직한 세계를 실현하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개인적 행동의 실천은 정책, 제도 개혁을 실행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노동자들의 공감을 얻는 탈성장 비전과 언어를 협력속에서 발전시키려면 참을성 있고 끈기 있는 경청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인구증가는 값싼 노동력과 소비자를 필요로 하는 성장시스템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급과 절제의 탈성장경제



만신창이가 된 지구생태계는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한 휴식은 없을 것이다.

탈성장경제라는 대안을 따르려면 어쩔 수 없이 산업생산량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는 포기 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감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탈성장사회의 모델, 제로성장 경제모델은 구조적 성장촉구요소와 문화적 성장촉구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전자는 복잡한 생산과 유통체계를 간소화하고 분해하는 것(지역의 공급 체계 또는 완전한 자급)이며 후자는 절제를 통해서 어느정도 완화될 수 있다.

근거리 경제 : 투명성, 동질감, 이해관계의 연동, 지역적 생산기술, 지역화폐 등
산업제품을 대체하는 창의적인 대안경제 : 공동이용, 이용수명연장, 자가생산 등

적정기술과 수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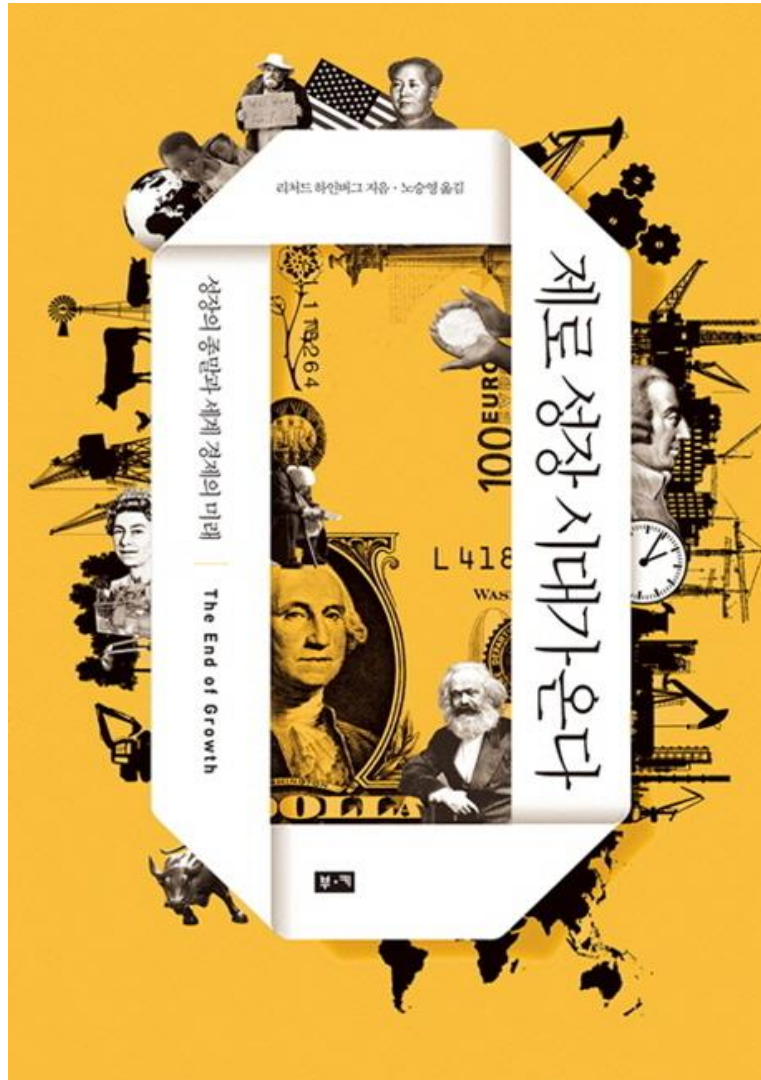
현대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은 소위 말하는 “에너지 노예”다. 예전에 사람들이 몸을 움직여서 할 일들을 요즘은 에너지가 대신해주고 있다.

슈마허는 현대의 기술이 인간들로부터 수작업을 훔쳤다고 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성장을 부추기게 된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다.편익과 이동성과 소비성이 높아질수록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더욱 심한 나락으로 떨어진다. 소비사회로의 길은 다시 말해서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극은 더 커진다...폭신한 방석에 앉아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은 비상시에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자립심을 가질 수 없다.

인구와 성장, 경쟁의 소용돌이



1900년에 인구가 **20억**이었으나 지금은 **70억**명을 넘는다. 해마다 새로운 소비자가 **7천만명**씩 시장에 진입한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가 침체하면 각 사람들에게 돌아갈 재화와 용역이 감소할테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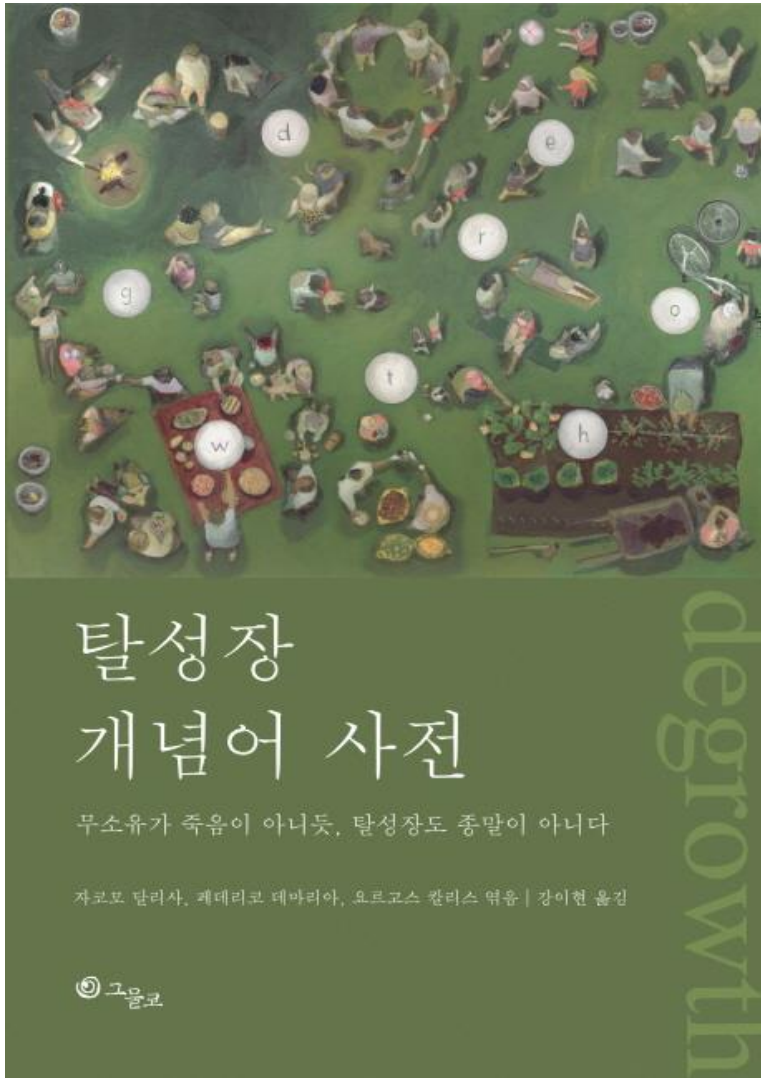
어떤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서의 삶보다 평형경제에서의 삶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성장은 일부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대체로 경쟁을 부추긴다. 누군가는 완승하고 누군가는 완패하는 와중에 공동체 안의 인간관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역성장이라는 단어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지만 “자발적 소박함” 운동이 등장했다.

성장 이후의 삶

- 이웃과 손잡기
- 공동체의 복원력을 키워라
- 공동안보클럽 : 공동학습, 상호부조, 사회참여

코끼리 다이어트가 아니라 달팽이로 전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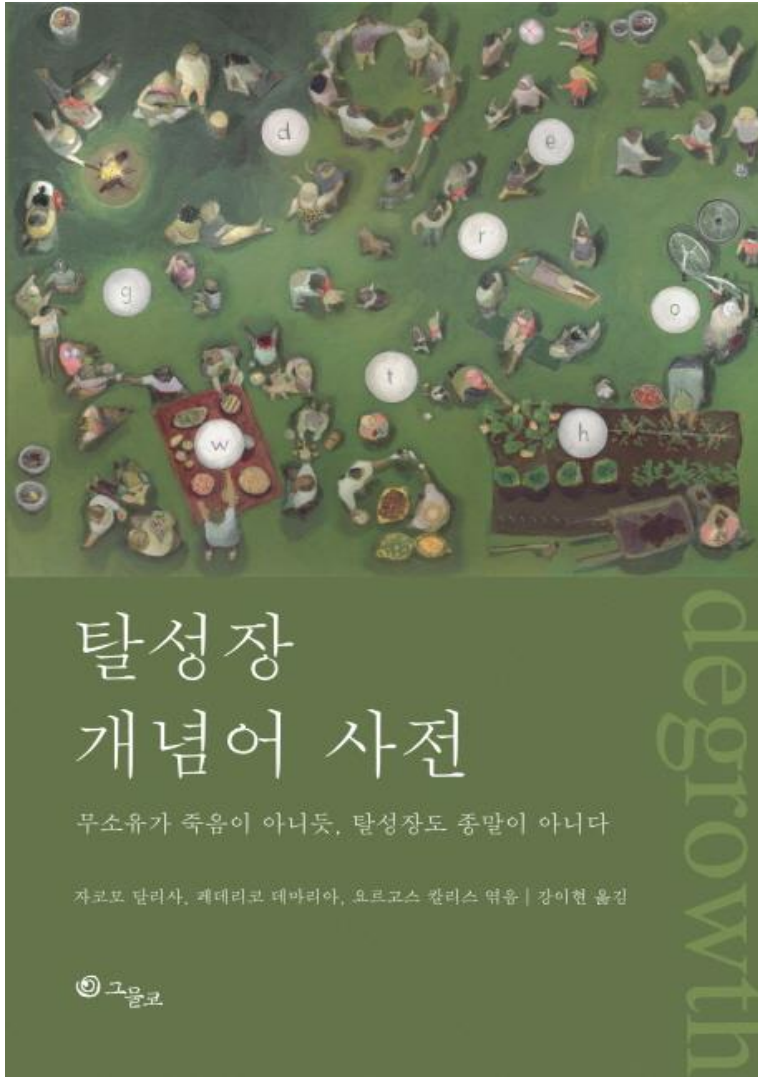


우리의 목표는 코끼리를 날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코끼리를 달팽이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적게가 아니라 다름에 초점을 맞춘다. 탈성장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탈성장이 국내총생산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탈성장이 국내총생산의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성장은 **1) 성장의 한계 2) 제한을 통한 해방과 자율성 확보 3) 자본주의 해체**

탈성장과 인구감소는 친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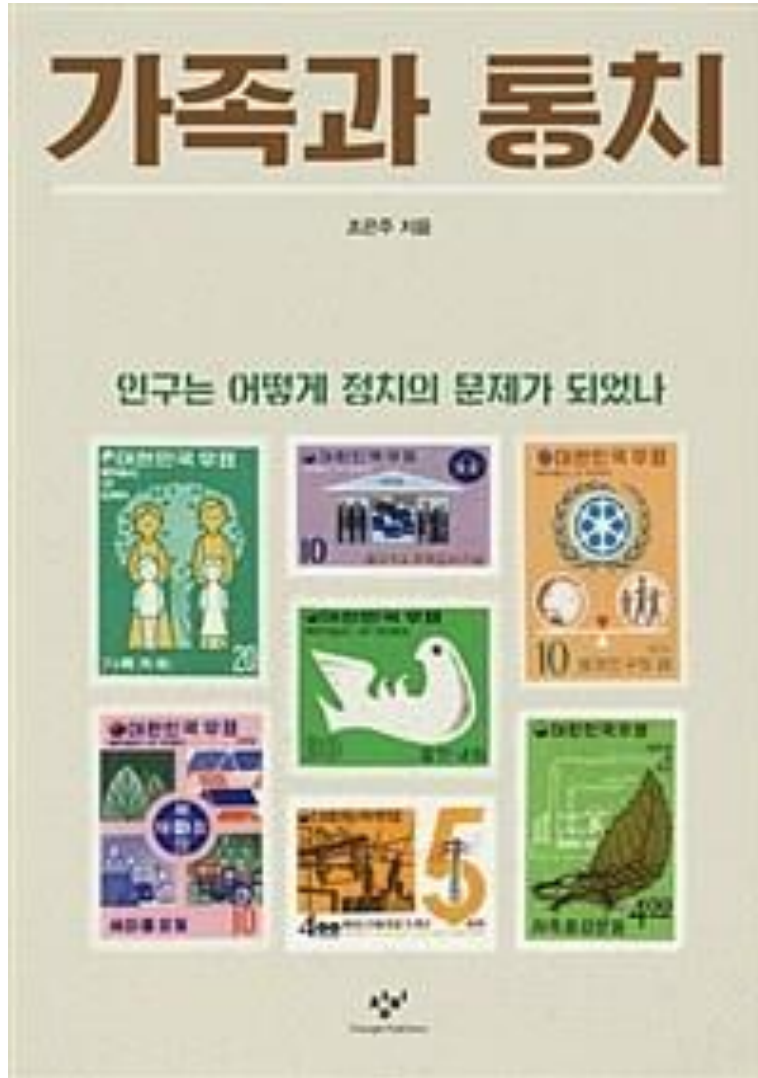


탈성장주의자들은 맬더스의 반동정책은 싫어하더라도 그의 주장이 일부 타당하고 인구증가에는 상응하는 비용이 따른다고 본다.

인구를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산업예비군”의 싸구려 노동력을 자본주의에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출산제한, 성장에 맞선 자가제한의 집단행동이라는 생각은 탈성장에 영감을 준다.

인구는 자본과 권력에 밀접하게 연관



인구는 자본주의 경제의 확산과 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근대적 재편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으며 부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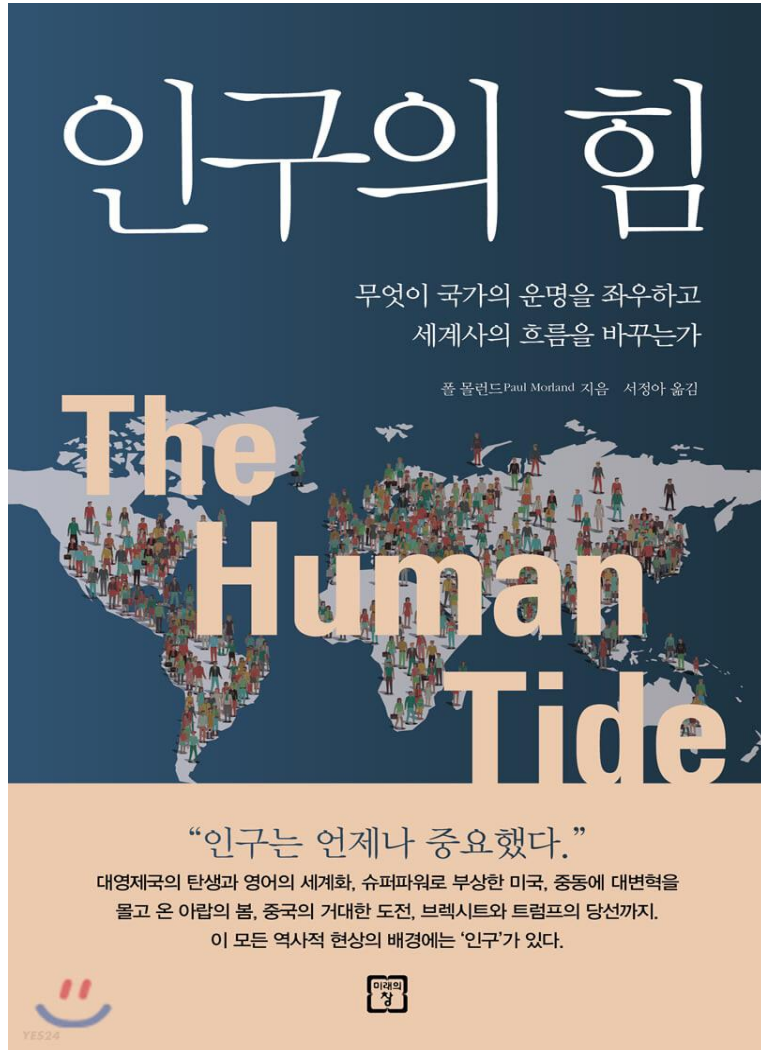
인구는 개개의 삶이 아니라 유기체적 전체의 질을 중요시하는 우생학과 쉽게 결합하는 개념이다. 즉, 인구는 애초부터 정치적인 문제였다.

현재의 저출산담론이 불러일으키는 탈정치의 정치, 반정치의 정치는 집합적 삶의 현재적 조건을 대면하는 대신에 저출산이나 고령사회가 가져온다는 미래사회의 위험에 경도되게 만든다.

1961년 가족계획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의결한 국가재건최고회의 내부에서도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특히 남한 군대가 한번도 전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가족계획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다.

인구개념에서 전체적 질 → 인적자원 → 교육 → 경쟁교육의 순환구조 포착

인구는 경제성장의 결과인 동시에 성장의 원료



19세기 초를 기점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질적 환경, 영양, 주거지, 건강, 교육이 크게 개선된 것은 분명 경제적인 현상이었지만 인구학적 현상이기도 했다....생활수준의 향상은 인구데이터 가운데서도 출생률과 사망률에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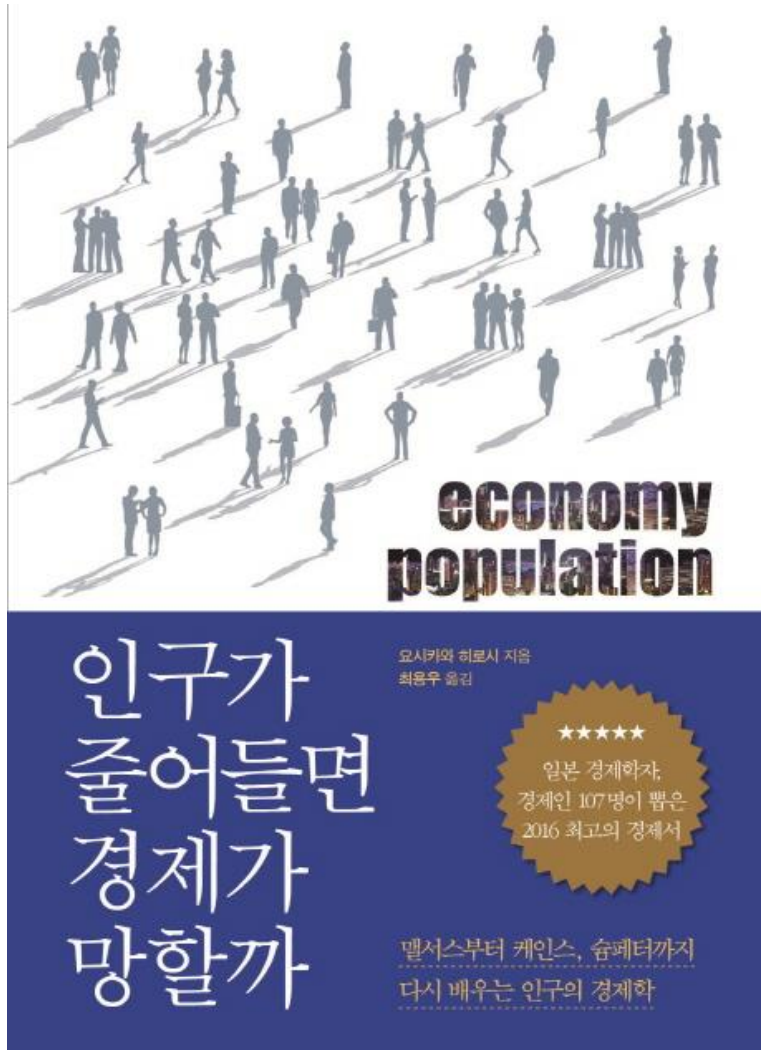
이는 모두 산업혁명에 뒤이은 근본적인 사회변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역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인구폭발이 없었다면 영국이 세계 곳곳의 광활한 영토에 식민지를 세울 수 없었을 것이고 자유무역의 일반화와 같은 세계화 현상이 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 인구가 10억명에 도달하는 것은 수십만년이 걸렸지만 70억명에 도달하는 것은 불과 수백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추세이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백성의 숫자가 국부를 만들어낸다”고 거침없이 말했다...인구가 젊고 성장하는 나라는 노동력과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는 경쟁을 야기



케인스는 <평화의 경제적 결과>에서 가장 먼저 인구를 분석했다. 독일의 인구증가에 대해 그는 반자급자족이던 농업국가 독일이 강대한 공업국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구증가로 인해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간 독일의 팽창주의가 생겨났다고 언급했다.

밀의 제로성장론

다른 경제학자들과 밀의 차이점은 정체상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평가한데 있다. 밀은 모든 사람들이 성장을 외치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존경쟁을 하듯이 타인을 밟고 일어서는 사회는 정말 싫다고 했다.

밀은 선진국에서는 제로성장사회가 필연적으로 빈곤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결같이 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 정상상태가 오히려 인간에게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는 경쟁을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부정적 측면 존재!

성장주의에 포획된 인구론



흔히 인구증가를 인구성장(**population growth**)이라고 하는데 원래 성장이란 용어는 생물학적 표현이다. 식물이 자라는 현상, 동물이 어른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진화론의 영향으로 사회현상 중 양적인 증가를 설명할 때 성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짐을 의미한다...많은 인구에 의한 사회 전반의 시너지효과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개발도상국의 많은 인구는 저임금의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생산가능인구란 흔히 **15~64**세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한국 등은 경제성장 시기에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인구보너스라고 한다.

모든 생물은 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겪음. 그렇다면 인류 역시 이런 생물학적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인구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 은연중에 우리는 인구를 성장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음.

인구감소가 탈성장의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인구증가→식량수요의 증가 →집약적 농업기술의 개발 → 농업생산량 증가
→ 인구증가, 노동력의 증가, 노동수요의 증가

100년간 세계인구는 4배 증가했고 자원사용량은 17배 증가했다

인구증가와 화석연료의 사용증가는 지구의 대기오염과 대기순환시스템에 영향을 주면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인구증가가 모든 환경문제의 핵심요인은 아닐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

성장을 멈추고 성장주의를 포기하는 것은 인구증가와 밀접하게 연관(특히, 개발도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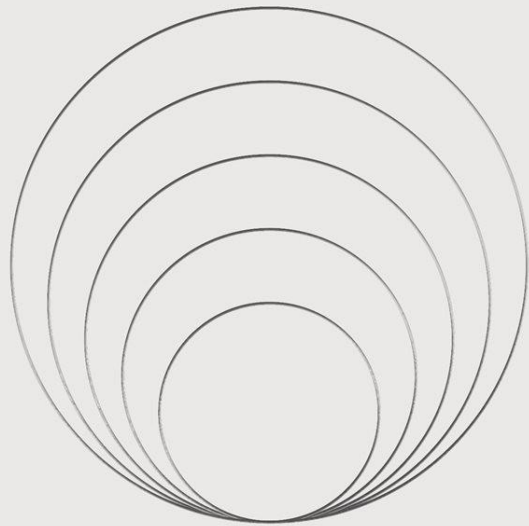
우리는 이미 인구감소를 선택한 것일지 모른다

EMPTY
PLANET

텅 빈 지구

다가오는 인구 감소의 충격

대럴 브리커, 존 이빗슨 지음
김병순 옮김



을유문화사



YES24

출생률이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 것이다. 인간 스스로 인구를 더 줄이기로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과거에 전혀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이다.

인간의 뇌는 가장 중요한 생식기관이다. - 전세계적인 여성들의 저출산 선택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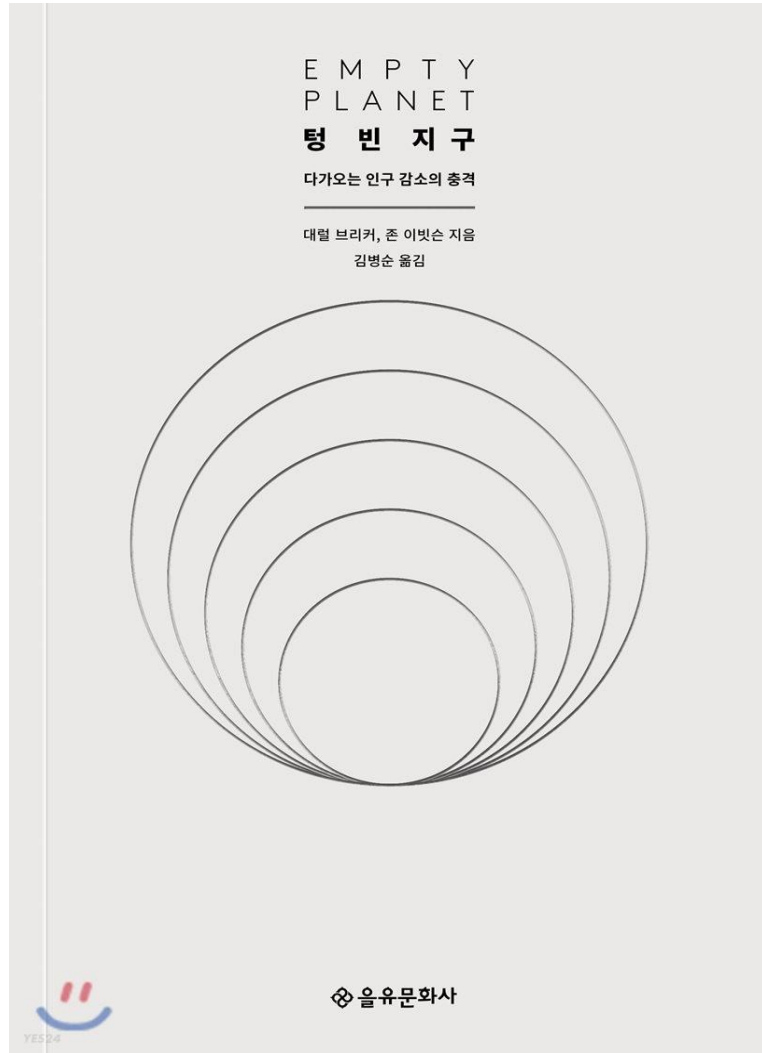
생각하기에 따라 그것은 축하할 일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많은 수십억명의 인구 압박이 없다면 지구의 허파는 숨쉬기가 훨씬 편해질 것이다.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이 줄면 기근과 빈곤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은 부분적으로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경제와 지정학적 영향력이 서로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마련이다.

인구감소가 반드시 사회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인류는 이같은 일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인구감소를 선택할 것일수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 권력의 작동이 결합되어 위기를 야기할 수도?

도시화의 다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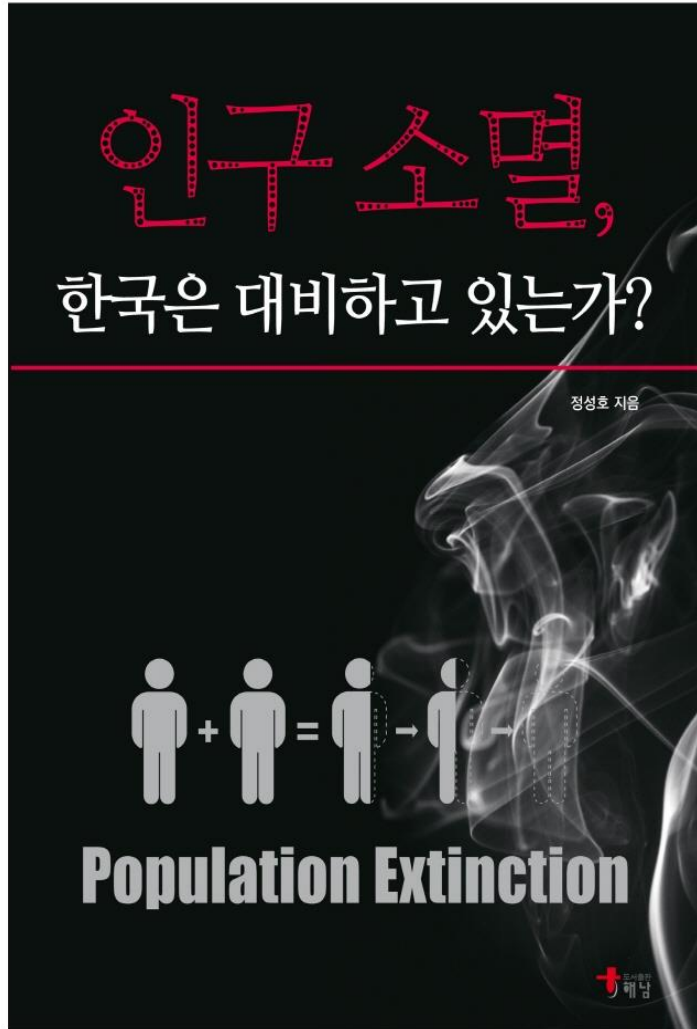
도시가 밀집되어 있을수록 환경에 좋은 것이 더 많다.

도시화는 지구온난화에 맞서는 새로운 협력자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나무다. 주변의 유희농지가 다시 숲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도시가 밀집되어 있을수록 출산률이 낮아진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출산을 포기한다. 도시가 밀집할수록 인구감소효과가 커진다.

신도시 개발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화가 저절로 숲을 가져오지 않는다. 개발은 끊임없이 유희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남은 공간은 숲이 되지 않고 빈집이 되고 폐허가 된다.

대재앙(?)으로서 인구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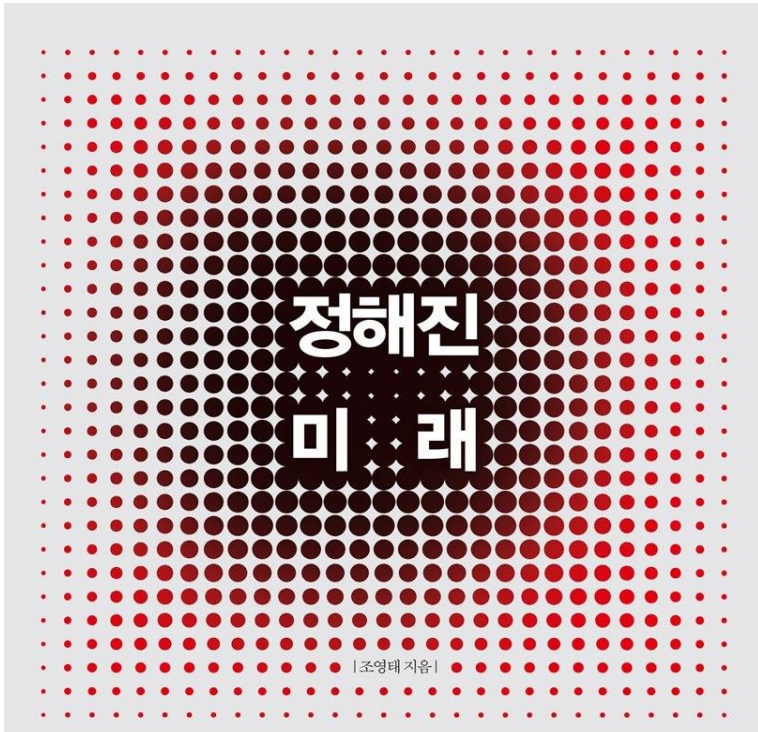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 대재앙으로 성큼 다가 오고 있다. 예견된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구성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데 가장 중요한 국민 소멸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인구감소는 정말 재앙인가? 왜 우리는 인구감소를 재앙으로 인식하게 되었는가?

탈성장과 인구감소는 이런 측면에서 근대국가로부터 탈출, 탈근대의 맥락과 연결

인구감소의 정해진 미래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임용교사의 수를 줄인다면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 일대 혼란이 빚어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젊은층에게 좋을 것이 하나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권력을 양분하는 두 정당이 모두 보수정당이 되는 것이므로 **2030**은 인구크기가 작아서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도 없다.

지금의 **2030**세대들은 윗세대와도 경쟁해야 한다. 그런데 코호트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세대 간 경쟁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좌절이 더 큰 것이 아닐까?

(인구가 감소하면) 도대체 나쁜 일 투성이다. 좋은 일은 없을까? 대학입시가 수월해지고 생애주기의 다양성이 증가할 것 또한 긍정적 변화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획일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다.

| 인구학이 말하는 10년 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 |

- 매일경제신문 2017년을 여는 베스트북
- 2017 정진기언론문화상 대상 수상
- 한국경제신문 올해의 경제경영서 (2016)

저출산과 고령화가 만드는 정해진 미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정해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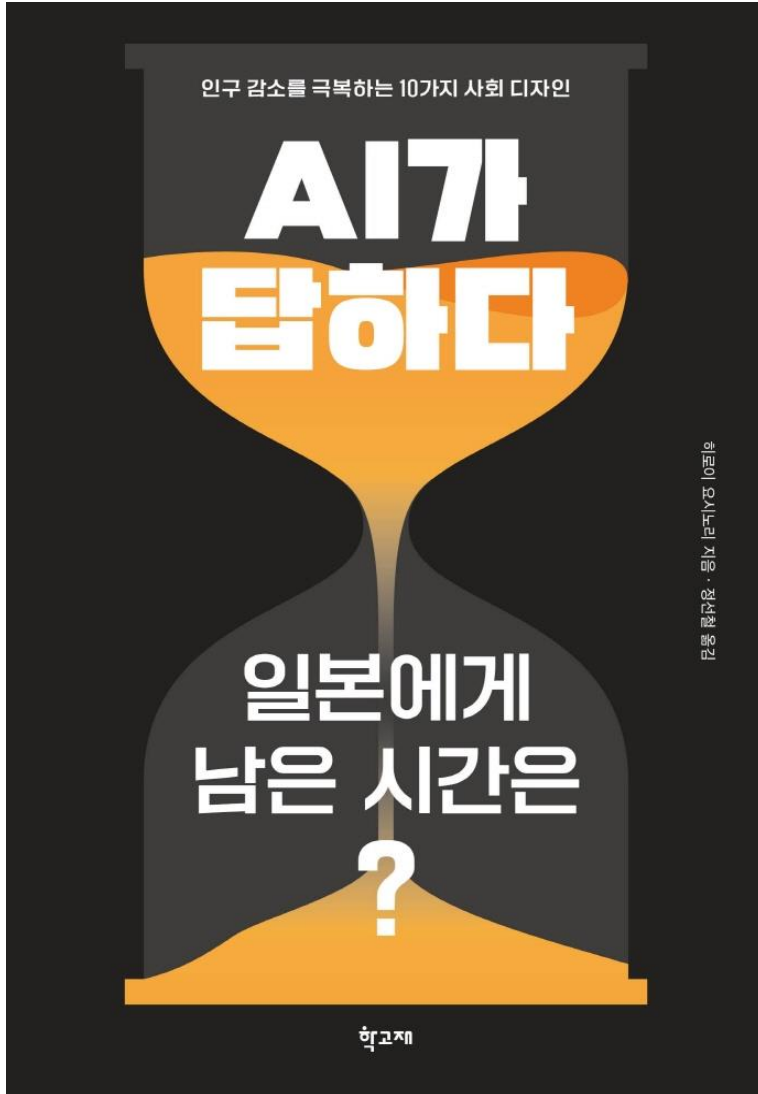
북스톤

정해진 미래, 즉 작아지는 사회규모에 우리의 제도와 문화, 인식까지도 큰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대갈등을 세대 간 연대와 협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정해진 미래에 대한 해법



인구감소는 나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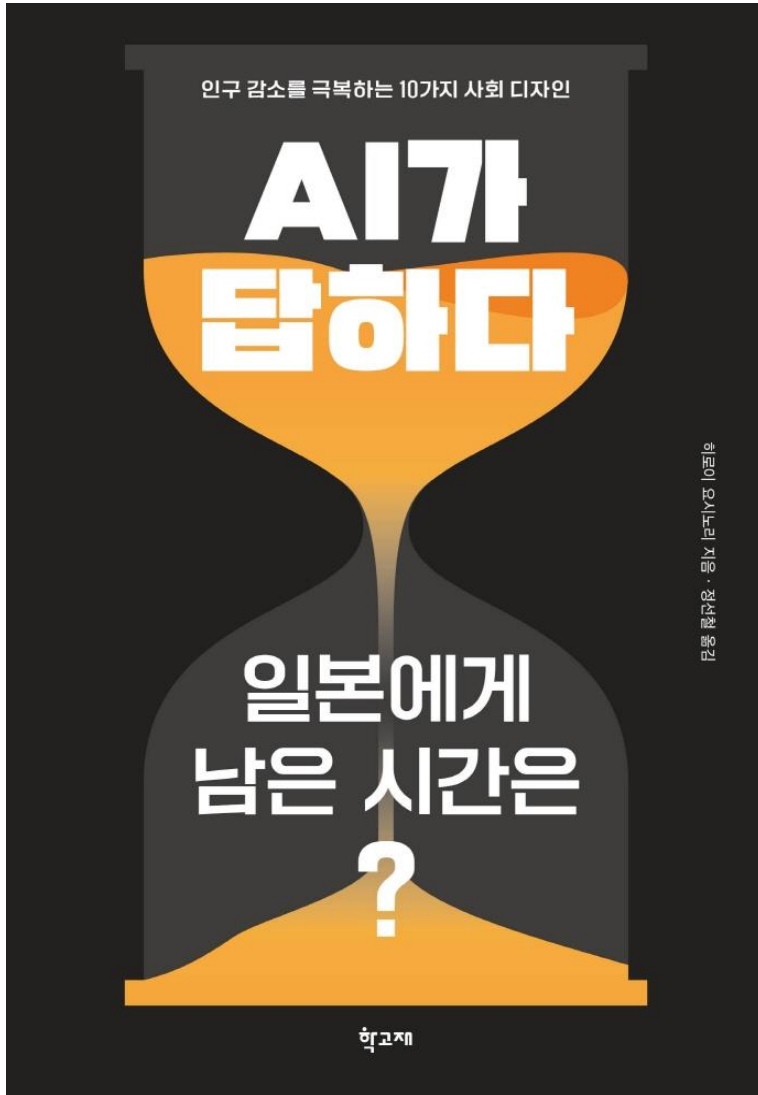
(인구급증시대의) 강력하고 일원적인 행동원리에서 사람들이 해방되어 언덕길을 올라 정상에 이른 후에 펼쳐진 넓은 공간에서 각자가 자유롭게 창조성을 발휘해 나가는 시대가 인구감소사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고령자가 늘어나겠지만 인구감소시대에는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개인이 일정하게 독립하면서도 동시에 고립되지 않고 집단을 넘어 느슨하게 연결되는 관계성을 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지역을 토대로 자유로운 개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느슨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회

인구감소사회의 정치경제



인구감소사회, 성숙사회에서는 양의 증대를 1차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창발이 가능한 여건을 확실히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인구감소사회에서는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의 분배문제가 더 중요해진다.

생산성이 최고조에 달한 미래사회에는 과잉억제, 재분배, 커뮤니티 경제가 방향
- 노동시간 단축, 사회보장, 지역순환경제

그러한 사태에 이르면 기본소득이 거의 필연적인 제도가 되겠지만 현재 실업상황 등을 보면...오히려 노인의 기초연금을 충실히 하면서 청년기본소득, 농업기본소득, 지역기본소득이 당분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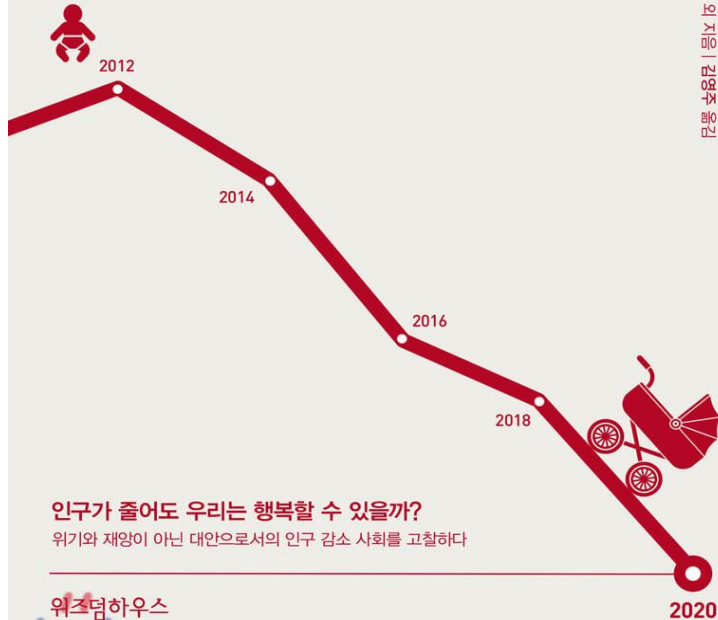
- 노동시간 단축
- 사회보장 강화
- 부분적 기본소득제 도입
- 지역순환경제

인구감소는 자연과정

인구감소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처방전

우치다 대표부 외 지음 | 김영주 옮김



인구가 줄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위기와 재앙이 아닌 대안으로서의 인구 감소 사회를 고찰하다

위즈덤하우스

인구감소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자연과정입니다.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한 인구팽창에 대응하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집단행동입니다.

솔직히 저출생은 개인의 행복에 확실하게 공헌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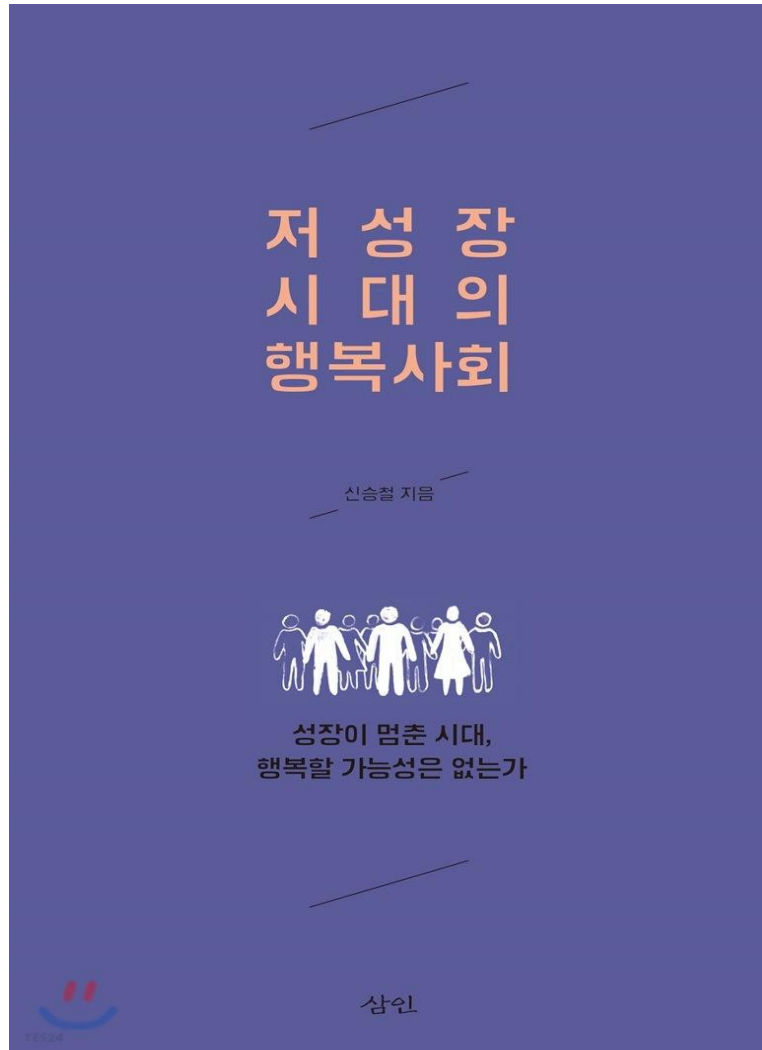
돈으로 돈을 사는 머니게임은 인류학적으로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인류학적으로 존재이유가 없는 존재가 타성으로 살아 있습니다. "좀비경제"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간과할 수 없는 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화는 무연화다. 공동체 내부에는 시장이 생기지 않는다. 인간사회는 원래 공동체적이고 사회부조적이었다.

인간이 그 안에서 생기를 공급하는 체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인간적 성숙을 요구하는 체계, 주변 사람들이 참가자를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체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체계, 이것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체계입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지방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식재료는 대부분 자급자족하고 그 밖의 물건은 기본소득으로 구매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자발적 가난



자발적 가난에 눈을 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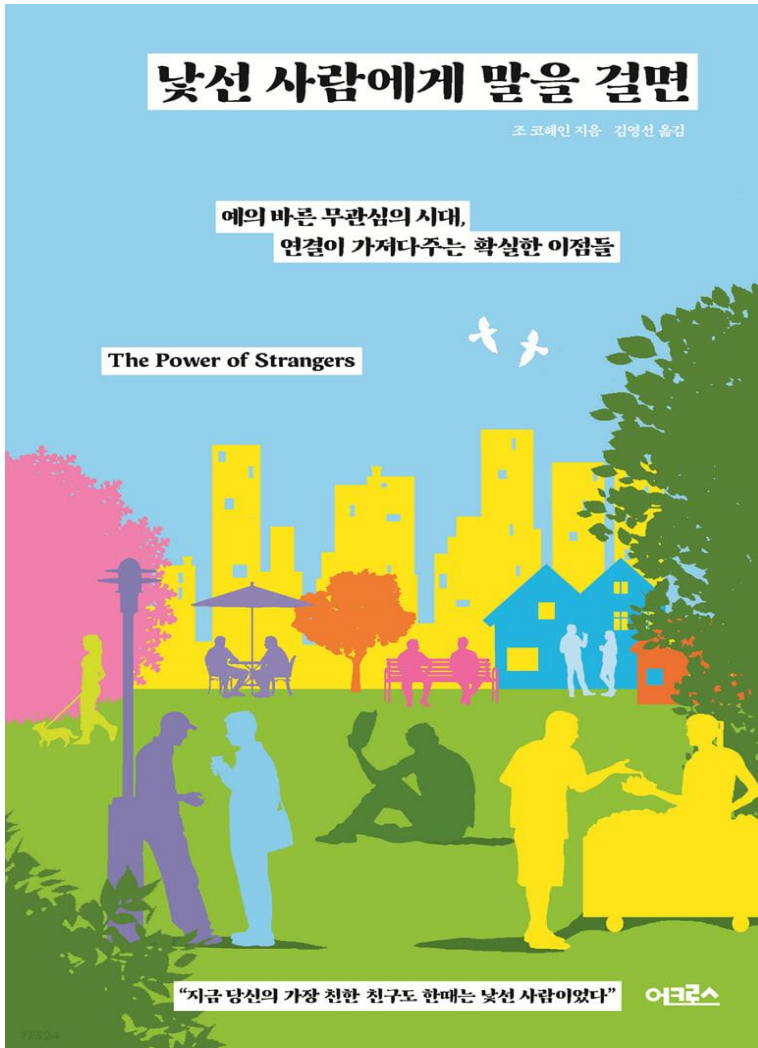
저는 기본소득에 모든 것을 걸지는 않겠습니다. 다양한 소득원 중에 하나, 즉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은 소득이라도 소득원의 다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든든하고 안심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행복을 소득이 대신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본소득이 생기면 저는 더 자발적 가난을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풍요가 아닌 가난?

그러나 관계망의 빈곤에 있는 현대인들에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행복이 없다면?

관계의 힘으로!!



영국 적십자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영국인구의 **1/5**은 자주 또는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 **2018**년 영국은 첫 고독담당장관을 임명했다. 이 고위직 국가공무원은 약해진 사회유대를 회복해 결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 **15**년간 연구자들은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누면 더 행복해지고 삶의 터전과 더 단단하게 연결되며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남을 더 잘 믿고 더 낙관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사회화가 생존이고 생존이 곧 사회화였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진화했고 초협력하는 종으로서 번영하게 되었다. 아이러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멀어지기는 했지만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인구감소의 시대,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 아닐까?

내 가족주의, 내 새끼주의로부터 벗어나기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답은 “좋은 관계”

한국인은 선호미래로 "붕괴" 를 지목

미래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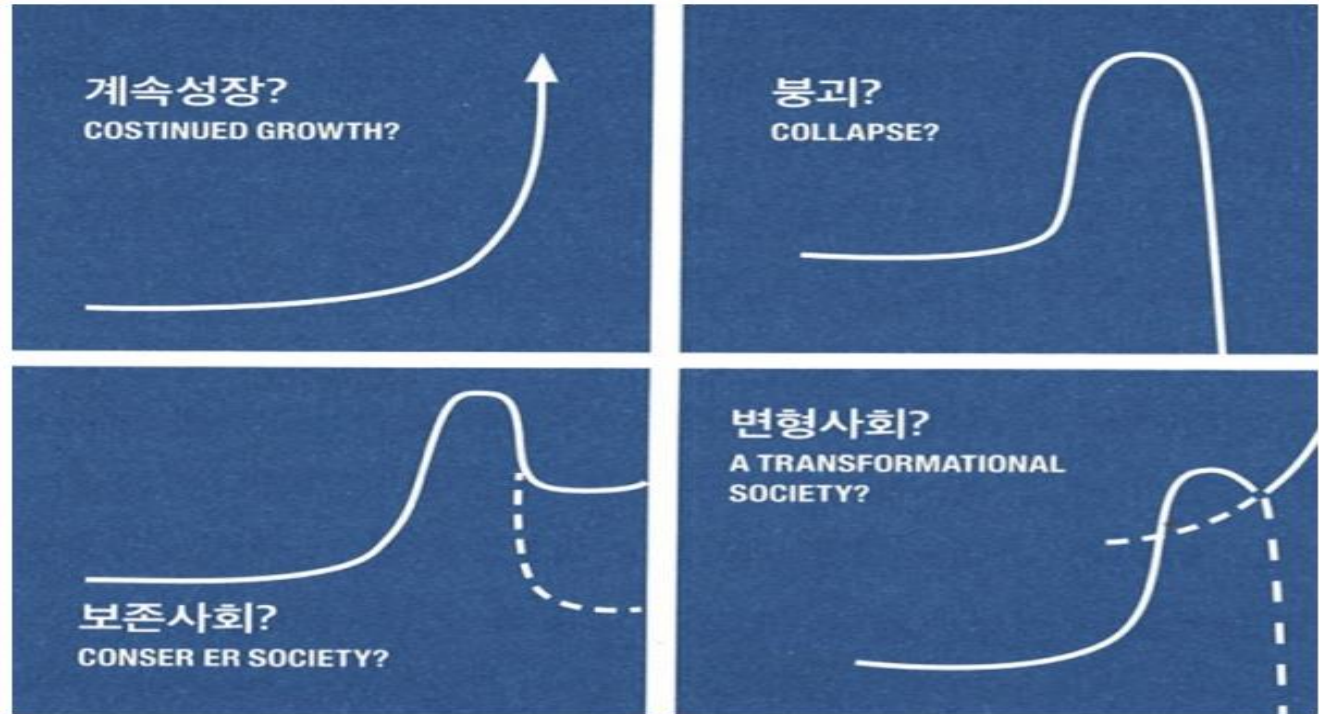
전례 없던, 미래의 변화
원치 않는 단면 변화에 대한 막대한 우려
변화 없는 미래
10년의 연구가 제시하는 미래 돌파구

★두 눈 똑바로 뜨고 다가오는 미래를 품기 위해 읽어야 할 책!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미래를 예측할 근육을 만들어줄 것.
이광형 KAIST 교수

3년의 미래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것은 붕괴

- 한 사회의 붕괴는 경제적 위기, 자원고갈, 환경재앙, 전쟁, 도덕적 타락, 전염병의 창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벌어진다. 붕괴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고 경고한다.



드림의 나라와 만유사회



붕괴 시나리오 제목 : 드림의 나라
 물질적 성장지표가 아니라 국민행복지수가 도입
 경쟁이 없는 시나리오
 우리 사회가 붕괴되는 시작점이 한가로움에 대한 열망이 치솟는 때로 상정
 도시환경오염, 귀농인구 대폭 증가
 지역별 자급자족 경제와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경제성장이라는 비전은 기성세대에게 생존의 문제였다....그러나 지금의 청년세대는 경제성장을 선택의 문제라고 본다.

- 방랑인과 만유사회
- 한가로이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노닐
 - 땀짓과 멍 때리기
 - 미래에 대한 복수의 비전
 - 만보객 : 저항하듯 어슬렁거리는 사람

탈성장 인구감소사회의 비전으로 만유사회?

스마트 쇠퇴와 축소도시

“작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다”(small can be beautiful)는 표현을 통해 축소도시의 지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성장을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스마트축소도시를 기본적으로 성장을 뒤로하고(포기하고) 인구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에 대안을 찾는 것으로 정의한다**(박윤미,2017). 또한 축소도시에는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성장주의가 환경을 파괴하고 지방의 중소도시를 획일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약화시켰다는 반성이 포함되어 있다(강인호 · 노세희,2017).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쇠퇴는 도시쇠퇴를 불가피한 도시현상으로 인정하고 이것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스마트쇠퇴는 도시재생과도 구분된다. 전자가 쇠퇴를 인정하면서 축소계획을 수립추진한다면 도시재생은 현상유지를 목표로 도시를 재활성화하려고 한다(전경구 · 전형준,2016). 일본의 도시사례에서 축소都市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강인호 · 노세희,2017). 결국 공공부문의 자원과 예산의 부족을 시민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해 보완하면서 쇠퇴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는 주민들에게 도시쇠퇴와 도시축소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강인호 · 박성진,2020). 성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쇠퇴와 수축을 주민들에게 납득시키지 못하면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건물 복합화와 다심형 압축도시



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

나이지 노부히로 지음
홍남연구원 기획
임준홍·박준성·김정연·김현수·임지현 옮김

마을 만들기가 키워드

일본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여러 해를 겪으며 고령화와 저출산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울
출판사

향후 **30**년간 일본의 인구는 **20%** 감소한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프라 총량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공공시설이 주는 서비스는 주민과 공동체에 중요하고 실제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

인구증가시기에 공공시설이 대폭 늘어났고 큰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건물확대가 진행되었다.

인근 도시에 시민회관이 지어지면 왜 우리시에는 없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그렇게 건물 플세트주의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다.

다른 기능을 갖는 공공시설을 모아 복합화 : 비용절감

지방중소도에서서 압축도시화가 필요하다. 집약화는 자동차 교통의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길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저탄소도시화로도 이어진다.

하나의 단심형 압축도시가 아닌 복수의 거점을 갖는 다심형 압축도시이다.

교류 자체가 커뮤니티의 목적



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

나이지노 노부히로 지음
홍남연구원 기획
임준홍·박순성·김정연·김현수·임지현 옮김

마을 만들기가 키워드

일본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이 책은 저성장 시대의 도시 정책을 논하고 있다. ... 도시계획의 새로운 키워드는 무엇일까? 이 책은 저성장 시대의 도시정책을 논하고 있다. ... 도시계획의 새로운 키워드는 무엇일까?



한울
출판사

인구감소를 주시하면서 마을만들기의 방향성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고령화사회는 지역에 밀착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증대시킨다...지역밀착인구가 증대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생활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공업사회를 지나 물질적으로 풍부한 생활을 손에 넣은 성숙사회의 생활은 정신적인 내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때문에 커뮤니티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된다.

커뮤니티는 교류를 통해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 자체가 목적이 된다.

무사시노 플레이스

일본에서 제일 변화한 도서관을 목표로!

아이들은 떠들고 어른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술 한잔 하는 도서관

탈성장과 분배론

탈성장론적 사회혁신을 위해 지역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성장의 대척점에는 분배가 위치했다(김비환,2016).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이 논의되는 특징이며 탈성장론이 단순히 경제성장의 반대가 아니라 더욱 넓은 개념이지만 **한국사회에서 탈성장론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분배론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칼리스 등의 탈성장론자들의 보편적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서비스, 돌봄수당, 공동자산(커먼즈)를 강조한 것도 이와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기후위기와 탈성장을 날 것 그대로 외치기보다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돌봄수당 등 한국사회에서 필요하고 호응을 얻을만한 정책을 토대로 탈성장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성장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인식되면서 헤게모니로 자리 잡았듯이 기본서비스와 돌봄수당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 해법으로 자리잡을 때 시민들의 저절로(?) 성장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